

광주 도로 '포트홀 공포'...2758건 발생 차량파손 속출

지난달 폭설후 대량 발생...보름간 타이어·휠 훼손 등 218건 신고 고속도로·국도·일반도로 등 사고 지점 따라 보상 신청 접수처 달라 광주시 "재포장에 연 600~700억 필요...포트홀 근본대책 없어"

광주 도심 도로 곳곳에 우후죽순 생긴 포트홀(Pot hole·도로 파임) 때문에 운전자들이 차량파손 등 고질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운전자들은 '주간에도 포트홀이 두렵지만 밤 운전을 하다보면 포트홀은 공포'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폭설이 내린 지난 1월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15일 사이에 275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으며 차량파손 신고는 218건 접수됐다. 하루에 14건 넘게 차량파손이 접수되는 셈이다.

각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접수된 피해 신고까지 더하면 피해는 더욱 많다는 것이 광주시 설명이다.

시내보다는 외곽 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다 발생하는 사고가 잦으며 대부분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휠이 부서지는 등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포트홀로 입은 타이어 파손 등 피해에 대해 보상 신청을 할 경우, 접수처는 사고 지점에 따라 다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도로공사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하며 국도는 국토교통부, 일반도로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일반도로라 하더라도 폭이 20m 이상(왕복 4차로)일 경우 광주시를 통해, 20m 미만일 경우 자치구를 통해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피해 신고 시 각 도로 관리 주체가 가입한 영조물배상공제 보증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사고 지점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도로일 경우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에 배상신청을 해야 한다.

접수 시에는 배상신청서, 현장약도, 사고 현장 및 차량 등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고, 상해를 입었을 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도 챙겨야 한다.

피해 보상 여부는 결국 피해자가 손해사정사에

게 얼마나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제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규정 때문에 100% 보상 되지 않은데다 운전자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제도적 맹점에 있다.

지방재정공제회 광주시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상 신청 시 영조물배상공제 관련 손해사정사를 통해 사고 현장 및 사진, 서류 등을 확인하고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따진다. 이 과정에서 블랙박스 촬영 영상, 사고지점 사진, 약도, 사후처리 영수증 등을 통해 국가의 관리소홀 여부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가 피해보상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광주의 한 보험사 관계자는 "멀리서 포트홀을 보고 미리 인식할 수 있었는가 여부에서 과실 비율이 많이 갈린다. 야간이거나 빗길이었는지, 안전 거리를 확보했는지, 과속을 하진 않았는지, 국가에서 포트홀 관련 주의 안내문을 인근에 설치했는지 등이 영향을 미친다"며 "전방 주시 의무 때문에 운전자 책임이 0%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10~40%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포트홀 응급 보수반 9개조 30명을 편성, 도로 순찰 및 긴급 보수를 시행 중이다.

또한 45억여원 예산으로 포트홀 발생이 잦은 노후 도로에 대한 철삭 및 덧씌우기 공사도 하고 있다. 하지만 기껏해야 연간 50km 가량 보수할 수 있는 예산에 불과해 광주시가 관리하는 378개 노선 597km, 1차 차로로 환산 시 5000여km의 도로를 관리하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포트홀 주 원인인 도로 노후를 막으려면 사용 연한에 맞춰 6년에 한번씩 도로를 재포장해야 하나, 연간 600~700억원이 투입돼야 가능하다"며 "포트홀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으나, 최대한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일 광주 지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광주시 동구 충장동의 한 도로에 대형 포트홀이 방치돼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활동보조사와 나들이 나온 장애인 송광사 계곡서 숨겨

장애인 활동보조사와 함께 사찰로 나들이에 나선 지적장애 어린이가 계곡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 40분께 순천시 모 사찰 인근 계곡에서 A(10)군이 물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광주에 거주하는 A군은 활동보조사 B씨와 사찰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전에도 B씨와 이 사찰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활동보조사는 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을 돕는 전문 보조인력이다.

경찰은 B씨가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는 중에 A군이 홀로 돌아다니다 계곡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병원 이사 직책 이용

간호사·직원 상습 성추행

70대 남성 법정 구속

병원의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성 간호사와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5일 오후 6시께 병원 여직원의 팔을 잡아 당겨 추행한 것을 비롯해 2021년 5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여성 간호사 등 5명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기획이사 및 센터장으로 근무한 A씨는 병원 내 환자 유치 및 행정업무를 총괄 관리 하면서 피해자들의 직속상사로 업무를 보고 받거나 문서를 결재 받는 등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반발할 경우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30대 여성 간호사들을 상대로 귀에 입술을 가져다대 귀속말로 속삭이거나 신체 중요 부위를 스치는 방법으로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내 하급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부정선거운동 혐의 첫 고발

울 해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총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가 처음으로 고발됐다.

5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지난 1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대담 형식의 행사를 열면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공연을 선보인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아 대담 형식 행사를 개최하고 선거공약을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갭투자로 사들인 오피스텔 100여채로 전세사기 70대 기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50여명 피해

검찰이 나주에서 일명 '갭투자'로 100여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70대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70대 A씨를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경부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일대에서 100여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구입

해 전세를 내줬다가 임대인 50여명에게 임대차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 44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갭투자로,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이다.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보증금 액수를 낮춘 위조 계약서인 일명 '다운계약서' 37장을 나주시청 등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본금이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인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보증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증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코인 투자에 사용하다가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 보증금을 절반 정도로 기재하거나 매달 받는 월세금액도 줄여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과 청년들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